

2012-01-02

4.11 총선과 여성정치세력화 평가토론회

일 시 2012년 5월 10(목) 오후2시

장 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전화 : 02-313-1632 전송 : 02-313-1649

홈페이지 : <http://www.women21.or.kr>

e-mail : kwau@women21.or.kr

차례

좌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간	내용
인사말 (14:00-14:10)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 (14:10-14:40) (14:40-15:40)	발제1. “19대 총선과 여성정치의 발전”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1.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장) 토론2. 이준한(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3.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종합토론 (15:40-16: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색간지)

발제. 19대 총선과 여성정치의 발전

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색간지)

19대 총선과 여성정치의 발전

1. 서론

2012년 4월 11일에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정당개혁이었다. 기존 정당들에 실망한 국민들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의 박원순을 선택하면서 기존 정당들은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민주당은 범국민연대와 야권연합을 결정하고 민주통합당을 결성하였고 민주노동당 역시 진보계열의 정치세력과 연합하여 통합진보당을 형성하였다. 다시 이 두 당은 통합진보당 후보 단일화 전략지역 16곳, 지역별 후보단일화와 민주당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민주당 후보가 용퇴하기로 9개 지역을 합의하는 등 야권을 단일화했다. 한나라당은 지지도의 하락 및 내부적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이어서 새누리당으로 개편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새판 짜기의 19대 총선은 곧이어 공천에서 정당개혁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19대 총선은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공정한 공천을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누구를 공천하느냐 하는 것은 각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일이며 유권자들에게는 자신들이 투표할 대상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여성의 대표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당의 공천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다. 물론 무소속 후보도 가능하지만 정당정치의 발전과 더불어 정당의 후보가 아니고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의 대표성 확대의 첫 번째 관문은 정당의 공천이다. 정당 공천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정당 공천과 여성의 대표성 문제가 2000년대에 오면서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오미연, 김기정, 김민정, 2005; 김민정, 2002; 김민정, 2009).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현역의원 교체를 내세우면서 인적 쇄신을 통한 공천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역의원 교체를 통한 인적 쇄신방식의 공천은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공천과정에서는 모바일 투표를 통한 경선이 큰 부작용을 낳았고 통합진보당에서는 당원투표를 통한 공천방식이라는 하는 상향식 공천방식이 또한 부정투표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공정한 공천 시스템 마련이라는 큰 화두를 던졌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공천의 확대를 각 정당은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권고만큼 이루지 못하였고 정당에서 공천 초기에 표방했던 비율만큼도 맞추지 못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논란들이 발생하여 선거쟁점화 되었다(김옥 2012). 후보들의 각종 의혹 논란, 막말 파문,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이 그것이다. 여성과 관련하여 여성 공천 확대를 둘러싼 남성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은 공천에서 여성이라는 변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결과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서 정치참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8대 총선에서 46%에 그쳤던 투표율은 19대 총선에서 54.3%에 도달함으로써 반등하였다. 또한 SNS 등 새로운 소통 수단이 정치에서 중요해졌다는 것이 선거결과분석에서 많이 나왔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총선 결과분석을 여성정치 확대를 점에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정치발전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정당의 공천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점검해보고 3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여성정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4장에서는 여성정치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보면서 논의를 맺고자 한다.

2. 정당의 여성 국회의원 후보공천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정당의 공천방식과 여성정치인의 공천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방식이다. 후보의 공천과정은 정당내부의 권력투쟁의 과정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후보 공천과정의 특성은 정당 권력관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전용주 2005, 218). 그래서 정당마다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당의 후보공천방식은 역으로 다시 정당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킨다. 즉 민주화된 정당조직은 민주화된 후보공천을 낳고 민주화된 후보공천은 다시 정당조직의 민주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정당공천방식은 비민주적인 정당의 권력관계의 산물이며 이러한 방식은 다시 비민주적인 정당의 권력관계를 강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정치의 관점으로 이를 보면 여성을 배제시키는 공천방식은 여성이 배제된 정당의 권력관계의 산물이며 이를 통해서 여성을 다시금 정당의 권력관계를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정당 문화를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공천방식으로 여성을 공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시점에서의 정당 내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정당 내 여성지위에 영향을 준다.

공천방식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보면 상향식 공천방식과 하향식 공천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노리스는 관료화정도와 중앙집권화정도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Norris 1996, 203-208). 일반적으로 정당의 구조는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기층에는 일반당원이 있고 그 위에는 후보예정자들이 있는 중간층이 있고 최상위에는 정당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상향식 공천의 경우에는 일반당원 혹은 지구당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공천이 결정되는 것이며 하향식 결정방식은 당의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방식인데 후원식 결정방식과 관료적 공천방식이 있다. 즉 상향식 공천방식은 중앙집권화 되지 않은 방식으로 분권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향식 공천방식은 중앙집권적 공천방식이다. 두 번째 기준은 관료화이다. 관료적 공천방식은 제도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정당에서 정당의 내규 및 당헌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공천과정이 정해져있고 이에 따라서 표준화, 제도화되어 있는 공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외부의 관찰자들에게도 당내의 공천방식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진다. 반면에 후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방식은 공천과정이 폐쇄적이며 결정권자들은 상당히 은밀하고 비공개적으로 공천한다.

정당의 공천과정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부터 지방분권적인 방식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한 쪽 극단에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까지도 가능한 방식이 있는가하면 다른 극단에는 당의 지도부에서 공천을 결정하는 방식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미국이 대표적인 예로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예비선거의 방식이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여기에 속하는데 캐나다의 중요 정당에서는 정당의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결정한다. 영국 노동당의 경우에는 지구당이 공천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일반당원 혹은 지구당이 공천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상향식 공천방식이다. 이러한 상향식의 공천방식은 당내 민주화의 중요한 측면이다(홍득표 2000).

하향식 공천방식은 지구당이나 혹은 일반당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작고 주로 중앙당의 소수 지도자에 의해서 일방적인 지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인 후보 공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인 관료화를 중심으로 볼 때 민주적인 공천방식일수록 관료적이다. 명백하게 당헌 혹은 당규를 통해서 공천과정을 표준화하고 제도화할수록 민주화된 방식이며 폐쇄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 없이 공천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비민주적인 공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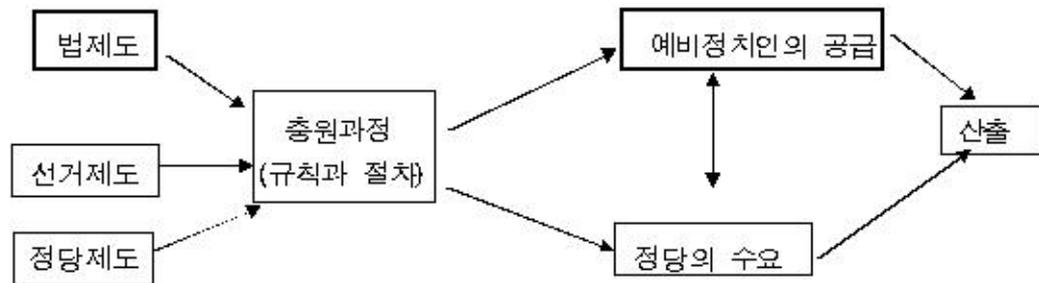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당의 공천방식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여성을 가장 많이 공천하는 방식이 상향식의 관료제적 방식이다. 당원 및 지구당의 대의원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정확하고 명확한 규칙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김민정 2002). 이러한 방식의 경우에는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직 정당의 민주화가 확립되어있지 않고 정당 내에 남성 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인 정당에서는 하향식의 후원제적 방식이 또한 여성들의 공천에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 정당의 민주화가 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명부를 만들거나 혹은 지역구에 공천을 할 때 여성들을 배려하여 지구당에서, 혹은 경선을 통해서 공천에 이르지 못한 여성들을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여 많은 여성들을 공천하는 경우가 있다. 1997년 프랑스 사회당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구당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천이 이루어졌으나 중앙당에서 여성을 배려하여 전략적으로 여성을 공천하였고 그 결과 이전보다는 많은 여성이 당선되었다(김민정 1998, 312-13). 이러한 경우 상향식의 공천방식과 하향식의 공천방식을 조합한 공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17대 총선의 공천과정을 분석한 논문에서 공천 과정의 민주화가 정치적 소수 특히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선제와 더불어 중앙당 차원에서 여성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의 여성들을 공천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주장을 펴고 있다(전용주 2005, 233). 그러나 하향식의 후원제적 공천의 경우에는 다른 연구에서 보면 할당으로 정계에 입문한 여성들이 '명목상의 여성(Token Women)'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Zetterberg 2008). 제터베르그는 할당제로 정계에 입문한 여성들이 입법 활동 및 정치활동에서 자율성이 높고 자신의 의견대로 활동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여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공천기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경우와 둘째는 공천과정에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이다. 공천기구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을수록 공천을 하는 정당지도부에 공천을 받은 여성이 의존하게 되며 공천과정이 뚜렷한 규칙과 명시화된 기준이 없을 경우 또한 정당 지도부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하향식의 후원방식 공천은 공천 받은 여성들을 정당지도부에 예속시키는 장치로 될 가능성이 높아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으로서의 입법 활동 혹은 독자적인 자율적인 정치활동보다는 정당지도부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정당 지도부는 자기들이 활용하기 좋은 상징성을 가진 여성으로서 당내나 혹은 당 외부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루기 쉬운' 여성을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자율성이 떨어지는 입법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2) 한국의 정치제도와 여성의 충원

한 나라의 법률제도·선거제도·정당제도는 일련의 정치제도를 포괄하는 것들로서, 정치라는 영역에서 정치 지망생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정치 지망생들의 충원과정은 정당 조직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규칙과 제도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민주적으로 확립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정도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충원과정에서는 충원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Norris 1995, 4). 또한 충원의 결과는 정치 지망생들에게 성취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미 충원된 국회의원들은 정치 지망생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게 하는 자원(resource)이 된다. 그리고 보다 투명한 중원과정을 위해 유권자·정당·재정적 후원자 혹은 정치 지도자들이 감시자가 되어 정치지방생 중 후보자를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후보자 중 당선자를 결정하는 중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중원모형

출처: Pippa Norris ed., *Passage to Power* (London:Cambridge, 1997) p.2

중원과 관련된 한국의 정치제도는 크게 정당측면과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여성국회의원의 중원과정에서는 참여유형관계를 정치제도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 선거제도와 정당구조의 변수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주요 정당은 여성을 국회의원으로 중원하는 데 있어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에 맞는 선거 전략을 고려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당들은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로 여성들을 공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당들의 후보 공천에 있어서 첫 번째 고려 요인은 득표력이기 때문에 본선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들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용주 2005, 226). 각 정당이 공천과정에서 여성 할당제 등을 적용하여 여성 후보자를 배출한다 하더라도 경력이나 조직, 인지도 등에서 남성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당의 입장에서는 정치 신인인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선거구 다수 득표제 보다는 비례대표제에 여성들을 많이 공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정치 현실인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선거제도가 한 국가에서의 정치적 중원의 경쟁방식과 양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같은 선거제도하에서라면 정당이 공천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느냐가 여성의 후보 공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예가 한국의 정치이다(김민정 2002, 3-31).

소선거구 다수 득표제(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중원이 비교적

용이한 한국여성위원의 경우, 정당의 공천을 통해 선택받은 후보자들만이 비례대표 후보 혹은 지역구 후보로 총원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화된 정당일수록 일반당원 및 지구당의 선택이 중요하겠지만 비민주적 정당일수록 중앙당 지도부의 의견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 정당의 공천 방식이 관료제적인 상향식의 공천방식이기 보다는 하향식의 비관료적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정당이 어떠한 여성을 총원하고자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위에도 보았듯이 대부분의 정당들은 후보 공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당선 경쟁력으로 꼽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당선 경쟁력이 없다고 알려져 왔다¹⁾. 따라서 여성들이 당선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공천을 하기 보다는 다른 이유로 여성들을 공천한다. 특히 현재의 선거제도하에서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 50% 할당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반드시 공천해야하는 경우에는 당선경쟁력이라는 요소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총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공천에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이다.

(3) 정당의 이해관계와 여성 국회의원 공천

이러한 한국 정치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 정당이 여성국회의원을 공천하기 위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오미연, 김기정, 김민정 2005).

<표 1>

정당의 국회의원후보 공천 주요 변수
지역적 형평성 재정적 기여 정당의 당내 역학관계 여성후보가 가지는 상징성

가. 지역적 형평성

일반적으로 한국정치에 있어서 엘리트 총원에 있어서 지역적 형평성은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다. 특히 탈권위주의 시대의 총원에 있어서 호남우대 등 지역적 대표성을 보다 고려하여 총원이 이루어져왔다(한승조 1999, 557). 여성국회의원의 공천과정에는 이러한 지역적 안배가 그다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당들은 여성의 경우 지역 간 안배를 고려하여 공천하기보다는 지역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²⁾. 18대

1) 한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결코 남성들에 비해서 당선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당선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정당의 지지기반이 약한 지역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지 결코 여성들이 본선에서 남성후보에 비해서 당선경쟁력을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황아란 2002, 203-222).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안배는 별로 작용하지 않았다.

나. 재정적 기여

주요 정당은 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 재정적 기여의 문제는 대체로 당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인 당비납부방식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당원이면 누구나 당비를 내야하는 당비의무가 있고, 당비는 일반당비(직책당비 포함), 특별당비의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일반당비는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납부하는 당비를 말하며, 특별당비는 일종의 기부금 형식으로 당에 납부하는 당비를 말하는데 후자의 경우 소위 금권정치 누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주요 정당의 당규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특별당비³⁾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신수경 1997, 20-22).

정당의 재정적 조직문제와 관련하여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 총원과정에서 있어 특별입당에 해당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거론된 이후에 정당에 입당하고 있는 현상에서 나타난다(신수경 1997). 그러나 실제로 특별입당에 대한 연구는 자세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주요 정당이 재정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제로 여성을 후보자로 공천하느냐의 문제이다. 남성 중심의 정치영역에서 주요 정당은 실제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재력 있는 남성후보자로부터 특별당비를 받고 소위 “좋은” 순번을 부여한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그러나 경험과 재정적 후원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에게 재정적 기여의 문제는 여성을 국회의원후보자로 공천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는 총선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각 정당이 비례대표후보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력은 있으나 별다른 당에 대한 기여는 없는 여성후보를 명부의 높은 순번에 배치하는 대가성의 특별당비를 받지 않았나 의심이 되고 있다. 여성후보의 공천의 경우에도 재정적인 기여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정당의 당내 역학관계

정당의 당내 역학관계는 언제나 공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어왔다.

- 2) 추미애 의원의 경우,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를 보면, 추의원이 대구출신이며 동시에 변호사라는 전문직종의 종사자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상충성을 크게 지녔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 김대중 당시 총재는 지역간 대립이 정치적 주요 과제였음을 고려하여 영남지방의 표에 대한 잠신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 추후보를 호남지방에 공천하려 했다. 물론 결과적으로 당시 추후보는 김대중 총재의 권유와는 달리 서울 지역을 택했고 당선되었지만, 이는 여성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공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타파하려는 당의 선거전략과 관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추미애 의원실의 유재섭 보좌관과의 인터뷰, 2003년 4월 22일).
- 3) <표 2> 특별당비와 관련된 한나라당 당규 제4조는 “당은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의 여러 계파간의 힘의 분배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졌고 공천이후에는 이러한 힘의 분배에 불만을 품은 당 계파들의 반발이 있어왔다. 때에 따라서 공천 전에 당 계파간의 갈등이 분당 사태를 가져오기도 하며 공천이후에 분당을 가져오기도 한다. 18대 총선은 정당의 당내 역학관계가 공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한나라당내의 계파 간 갈등은 공천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고 공천이후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많은 친박계 인사들이 탈당하여 친박연대를 만들고 선거에 참여하였다. 민주당에서도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역대 유례없이 많은 무소속 당선자를 낳았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공천이전에 계파 간의 갈등이 결국 분당을 가져와서 각자 선거에 참여하여 17대에 비해서 저조한 선거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당내 역학관계는 남녀 후보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에게 적용되는 변수이며 여성후보라고 하더라도 당내 역학관계에 따라 공천이 된다.

라. 선거전 승리를 위한 여성의 활용: 여성후보가 가지는 상징성

위에서 지역적 안배와 재정적 기여 문제가 남성후보의 공천과는 달리 여성의 공천에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실제로는 각 정당이 선거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서 어떤 여성을 활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정당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선거공약에 따라 여성 후보자를 공천한다. 정당은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를 중원하는 데 있어 당시의 총선거에 대한 당의 정책이나 전략이 상징성과 전문성에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여성인물을 조사하고 인물들과 접촉을 시도하여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해 여성후보자를 공천한다. 특히 정당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놓여있을 때, 혹은 기존의 정치인에 실망하여 새로운 정치인을 요구할 때 정당들은 주로 여성들을 공천하여왔다. 현재 세계에 여성 최고정치지도자(수상 혹은 대통령)은 모두 13명인데 이들의 등장배경에는 많은 경우에 정당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불안정 및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성을 내세운 경우에 해당한다(Kim 2008). 이러한 정치적 고려가 여성들의 공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수상이나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공천되는 여성 역시 남성후보와 다른 상징성이 그들을 공천하게 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상징성은 정당의 참신성, 변화, 혹은 정당의 이데올로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될 수도 있고 혹은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인물이라는 여성후보의 특징이 선거전에서 승리하게 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정치인이 많이 등장하게 된 시기는 유정희 국회의원시기였다. 당시 대부분의 국회의원 여성후보는 교수출신이거나 사회단체장 혹은 사회단체 임직원이었다. 이 시기의 여성정치인들은 유신정권의 비민주성을 포장하는 도

구로서 여성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정권’을 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민주화되면서 더 이상 정당이 민주성을 가장하기 위해서 여성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정치인으로서의 그들의 능력보다는 정당이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상징성 때문에 여성들을 후보로 공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여성후보들의 상징성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직업적 전문성, 정치적 경험, 여성계 혹은 시민사회 대표성, 그리고 정치가 가문의 후광이다. 이 시기의 정치적 정치인들은 유신정권의 비민주성을 포장하는 도구로서 여성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정권’을 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민주화되면서 더 이상 정당이 민주성을 가장하기 위해서 여성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정치인으로서의 그들의 능력보다는 정당이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상징성 때문에 여성들을 후보로 공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여성후보들의 상징성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직업적 전문성, 정치적 경험, 여성계 혹은 시민사회 대표성, 그리고 정치가 가문의 후광이다.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과정을 유형화한 기존의 연구는 대표적으로 두 선행 연구를 들 수 있다. 조기숙의 『세계를 움직인 열두 명의 여성』과 Irwin N. Gertzog의 *Congressional Women: Their Recruitment, Integration and Behavior* 가 그것이다(Gertzog 2005). 전자의 연구는 세계 각국의 여성정치 지도자의 출신배경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 지도자의 충원과정을 분류하였다. 조기숙 교수는 우선 여성 지도자의 유형을 여성적인 지도자, 남성적인 지도자, 통합적인 지도자로 분류하고, 그들의 충원과정을 내부자(insider), 외부자(outsider), 대리인(surrogate)⁴⁾으로 나누는 것이 유용하다고 말한다(조기숙 1998, 328-335). 이와는 달리 Irwin N Gertzog는 미국 의회의 여성원의 충원과정을 4가지-(1)결혼관계에 바탕한 과부의 죽은 (상원 혹은 하원이었던) 남편 승계 (widow's succession), (2)정치가의 가문이나 재력가의 가문의 후손(political and wealthy families), (3)법률계 종사(lawyers), (4)선거정치 경험(prior political experience)-로 유형화하고 이 유형들의 변화를 미국의 의회 역사 속에서 설명하여 여성의 정치적 충원을 일반화한다(Gertzog 1995).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존 연구 모두 한국의 여성국회원의 충원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조기숙 교수의 연구는 주로 최고지도자 수준에서 있었던 여성들 즉 대통령, 수상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국회의원과는 충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Irwin Gertzog의 연구 대상인 미국의회의 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환경에서 대리인모델은 거의 없고 14대의 현경자의원이 그 예에 해당

4) 여기서 내부자는 남성적 지도자에 가깝고, 외부자는 통합적 지도자로 분류되며, 대리인은 여성적 지도자와 남성적 지도자가 섞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내부자들은 일찍부터 정치에 입문해 남성으로부터 정치회습을 받았으며, 외부자들은 자신의 전문영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뒤늦게 정치에 입문하여 기존 정치권에 대항하여 자신의 영역을 구축했으며, 대리인은 아버지나 남편으로부터 권력을 세습 받았으므로 권력을 물려준 사람이 어떤 속성을 지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다. 박근혜의원의 경우에는 대리인보다는 내부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당에서 하향식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등용되는 전문직 여성의 경우 외부자 유형과 유사하지만 그들이 행사하는 리더십에 있어서 외부자와 차이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한국 내 정당의 여성 국회의원 공천 방식이 미국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Irwin Gertzog가 말하는 남편 승계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변호사가 충원된 배경과 정치적 구조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입법기관인 미국의 의회에서 변호사라는 전문직종이 가지는 유리함으로 변호사의 국회의원 충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과는 달리, 한국의 정당은 지식인들의 지지를 가지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주로 교수와 변호사 출신의 여성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왔다(김운태 1999, 618-621).

이제까지 충원된 여성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후보들은 4가지 통로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한다. 즉 정당들은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4가지 통로가 가지는 장점을 바탕으로 그들을 활용한다. (1) 대학의 교수, 변호사, 의사, 약사, 공무원, 언론, 출판인, 기업인과 같은 전문직종의 여성을 활용하는 경우, (2) 정계에 진출할 목적으로 일찍이 정당 활동에 투신하거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성정치가를 정당이 필요로 하는 경우, (3) 여성계 또는 시민단체에서의 활동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활용하는 경우, (4) 정치가 가문의 여성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4가지의 유형 가운데 정치가 민주화되고 정당정치가 안정되면서 정치가 가문의 여성을 활용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가족 연계에 의해서 충원되는 여성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남아시아인데(김정숙 1997), 이들 국가는 정치가 아직 전근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문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변수보다는 가문이라는 변수로 정치지도자에 충원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나 미국과 같이 민주화된 국가에서도 여전히 남편이나 아버지의 지역구를 승계 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 않으며 처음 정계에 진출할 때 이러한 가족 연계로 공천 받는 경우를 간간히 볼 수 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여성정치인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유형은 두 번째 정당인으로서 정치에 충원되는 경우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서구 민주주의 국가 여성국회위원의 대부분은 일찍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지방의회를 거쳐서 중앙의회로 진출하는 것이 여성국회위원의 하나의 경력 패턴으로 나타난다(김원홍 외 2003). 프랑스 여성 국회의원 71명 가운데 59명이 지방의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2003년 기준), 스웨덴 여성국회위원의 경우에는 79%의 여성국회위원이 지방의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영국 여성 하원의원 가운데 지방의원 경험을 가진 여성의원은 노동당의 경우 65%이며 보수당의 경우에는 50%이다(Norris, Lovenduski 1995, 160). 또한 현대의 정당정치를 생각할 때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정당

의 공천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여성이 여성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해도 정당이라는 이름을 가져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여성은 단지 정당과 동떨어진 여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연결된 여성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좋은 여성정치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적 입장과 일치하는 여성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정치의 발달,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인으로서의 여성의 충원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17대까지 여성단체들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함께 연합하여 다양한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쳤지만 18대에 와서는 아무런 연대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연대하기에는 어려울 만큼 정당들의 분리가 여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볼 때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여성정치인의 충원 유형은 정당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

<표1> 18, 19대 총선결과 비교

구분		18대 국회	19대 국회
여성 후보자	전체	215명(1,301명/16.5%)	142명(1,090명/13.03%)
	지역구	132명(1,113명/11.9%)	63명(902명/7.0%)
	비례	83명(188명/44.1%)	79명(188명/42.02%)
여성 당선자	전체	41명(299명/13.7%)	47명(300명/15.6%)
	지역구	14명(245명/5.7%)	19명(246명/7.72%)
	비례	27명(54명/50.0%)	28명(54명/51.85%)
여성 당선비율	전체	41명(215명/19.6%)	47명(142명/33.1%)
	지역구	14명(132명/10.6%)	19명(63명/30.16%)
	비례	27명(83명/32.5%)	28명(79명/35.44%)

출처: 김민정(20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국회(검색일: 2012년 4월 23일)

19대 총선에서는 전체 후보자 1090명 가운데 142명이 여성후보로서 18대에 비해서 여성후보가 많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여성후보가 44.7%를 차지하였지만 19대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에서 13.7%밖에 공천하지 않은 것은 큰 이유이다. 또한 당선자를 내지는 못했지만 평화통일가정당 37명을

공천하여서 여성공천자가 많았지만 19대에는 통합진보당에서 적게 공천하였고 평화 통일가정당과 같은 정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여성후보의 비율이 30%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권고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공천이었다.

<표2> 비례대표 후보자 현황

(인원: 명)

정당	전체	남	여성 후보(비율)	여성 당선(비율) ⁵⁾
새누리당	44	23	21(47.7%)	13(29.5%)
민주통합당	38	20	18(47.4%)	11(28.8%)
자유선진당	16	10	6(37.5%)	1(6.3%)
통합진보당	20	10	10(50.0%)	3(15.0%)
창조한국당	4	2	2(50.0%)	-
국민생각	7	4	3(42.9%)	-
대국민중심당	7	7	-	-
친박연합	4	2	2(50.0%)	-
국민행복당	6	3	3(50.0%)	-
기독당	8	6	2(25.0%)	-
녹색당	3	1	2(66.7%)	-
대한국당	3	3	-	-
미래연합	2	2	-	-
불교연합당	4	4	-	-
정통민주당	7	3	4(57.1%)	-
진보신당	7	3	4(57.1%)	-
청년당	4	2	2(50.0%)	-
한국기독교당	2	2	-	-
한국문화예술당	1	1	-	-
한나라당	1	1	-	-
계	188	109	79(42.0%)	28(14.8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검색일: 2012년 4월 23일)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47조 3항)에서 여성이 50%되게 명부를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특히 당선권내에서는 여성을 홀수에 남성을 짝수에 배치시키도록 법에 부합하여 공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방의회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성50%할당을 지키지 않은 정당 명부는 무효처리 되었지

5) 여성후보비율과 여성당선비율을 전체에서의 비율입니다.(여성후보/전체, 여성당선/전체)

만(52조2항)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성 50% 할당을 지키지 않은 정당의 명부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정당에서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은 명부의 경우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표3> 지역구 후보자 현황(정당별)

정당	전체	남	여성후보(비율)	18대여성후보	여성 당선(비율)
새누리당	230	214	16(7.0%)	18(7.3%)*	4(1.7%)
민주통합당	209	188	21(10.0%)	15(7.6%)**	13(6.2%)
자유선진당	50	48	2(4.0%)	2(2.1%)	0
통합진보당	51	44	7(13.7%)	46(44.7%)**	2(3.9%)
창조한국당	3	3	0		0
국민생각	20	19	1(5.0%)		0
친박연합	4	4	0		0
국민의힘	1	1	0		0
국민행복당	22	21	1(4.5%)		0
기독교당	4	3	1(25.0%)		0
녹색당	2	1	1(50.0%)		0
대한국당	1	1	0		0
미래연합	5	5	0		0
민주통일당	1	1	0		0
불교연합당	1	1	0		0
정통민주당	30	27	3(10.0%)		0
진보신당	23	19	4(17.4%)		0
청년당	3	3	0		0
한나라당	1	1	0		0
무소속	241	235	6(2.55)		0
계	902	839	63(7.0%)		19(2.1%)

출처: 선거관리위원회(검색일: 2012년 4월 23일)

- *한나라당
- **통합민주당
- ***민주노동당

19대 총선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지역구 여성의 공천확대였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여성공천에서 15% 공천을 약속하고 당헌당규에 이를 삽입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지키지는 못하였다. 새누리당에서도 공천혁신의 일환으로 여성공천 30%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7%밖에 공천하지 못하였다.

공천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각 정당의 공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단수공천(전략공천 포함)과 경선으로 나뉠 수 있다.

<표4> 민주통합당의 여성 공천

		공천율		비고	
여성공천신청자수		48			
여성공천자수	단수공천	19(18)	85.7%	전체공천중 단수공천의 비율	경남 진주시을의 서소연후보는 공천을 받았지만 야권단일화로 사퇴함
	경선	3	33%	경선참가 중 경선승리비율	10지역의 경선에 여성후보가 참여하였지만 3곳에서 승리함(10곳 가운데 한 곳인 광주 서구갑은 장하진 후보의 사퇴로 사실상 경선은 치러지지 않았다) 두 지역이 여성후보간 경선을 치름
	전체공천	21	43.7%	전체 여성예비후보 중 공천 비율	

<표5> 새누리당의 여성공천

		공천율		비고	
여성공천신청자수		65			
여성공천자수	단수공천	16	100%	전체공천중 단수공천의 비율	경남 진주시을의 서소연후보는 공천을 받았지만 야권단일화로 사퇴함
	경선	0	0%	경선참가 중 경선승리 비율	네지역의 경선에서 여성후보가 참여하였지만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함
	전체공천	16	24.6%	전체 여성예비후보 중 공천 비율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에서는 각각 여성공천을 단수공천과 경선으로 나누어서 공천이 진행되었다. 단수공천은 단독으로 공천 신청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단수공천과 당에서 전략지역으로 선택하여 전략 공천한 전략공천으로 나눌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총 48명의 여성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하여서 이 가운데 21명이 공천을 받아서 43.7%의 비교적 높은 공천률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총 65명이 공천을 신청하여 16명이 공천을 받아서 24.6%의 민주통합당보다는 낮은 공천율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은 단수공천이 전체 여성공천의 85.7%이고 경선에 의한 공천이 나머지 14.3%를 기록한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경선을 통한 공천은 한명도 없고 모두 단수공천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다.

17대에 부분적으로 경선이 치러진 경험과 비교해보면 17대 열린우리당의 경우 여성이 참여한 경선지역은 모두 8곳이었는데 2곳에서 경선을 통과하여 25%의 경선 성공률을 보인데 비해 이번 민주통합당 여성이 참여한 경선에서 모두 9곳에서 참여하여 3곳에서 승리하여 약간 높아진 경선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후보들의 경선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여성후보들은 당의 당규에 따라서 여성가산 20%를 받았고 2지역의 여성후보는 20% 덕분에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여성 20% 가산점은 여성후보의 경선 승리에 중요한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17대에는 2곳의 경선에서 여성후보가 참가하였지만 한 곳에서도 통과하지 못하였다(당시에는 한나라당). 19대 총선에서는 모두 네 지역의 경선에서 여성후보가 참가하였지만 한 곳에서도 통과하지 못하였다.

경선의 도입으로 부분적으로 경선이 시행되면서 여성예비후보들도 경선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선 통과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또한 경선이라는 장벽 때문에 미리 공천신청을 하지 않는 여성후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선은 여성들의 공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모바일투표를 통한 국민경선 제도는 지역적 기반이 약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를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성예비후보들에게는 지극히 부정적인 투표방식이라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17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단 한곳에서도 여성예비후보가 경선을 통과한 지역이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 여성예비후보들에게 경선은 쉽지 않은 제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표6> 19대 총선 여성당선자

구분		18대 국회	19대 국회
여성 당선자	전체	41명(299명/13.7%)	47명(300명/15.6%)
	지역구	14명(245명/5.7%)	19명(246명/7.72%)

	비례	27명 (54명/50.0%)	28명 (54명/51.85%)
여성 당선비율	전체	41명 (215명/19.6%)	47명 (142명/33.1%)
	지역구	14명 (132명/10.6%)	19명 (63명/30.16%)
	비례	27명 (83명/32.5%)	28명 (79명/35.44%)

<표7> 여성지역구 당선자의 변화

16대	17대	18대	19대
5명	10명	14명	19명

19대 총선 여성당선자는 모두 47명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19명 비례대표 당선자가 28명이다. 18대 지역구 당선자가 14명에서 19대에 19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16대에 5명이었던 여성 지역구 당선자는 17대에 10명, 18대에 14명에 이어서 19대에 19명으로 늘고 있다.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비율은 사실상 증가는 어렵다. 명부의 어디까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한두명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명부에서 50%를 할당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하기는 어렵다. 결국 여성의원의 증가는 지역구에서의 증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 곡선의 여성의원 증가에 청신호로 크게 반가운 일이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후보들의 지역구 경쟁력이 절대 남성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구 남성후보의 당선율 18대 23.5%에서 19대 28.2%로 증가하였지만 여성의원의 경우에는 18대에 10.6%에서 19대 30.16%로 크게 늘었다. 이번 19대에서는 남성과 비교하여서도 높은 당선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후보들이 큰 정당에서 안전한 지역에 공천을 받는다면 남성에 비해서 결코 당선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여성당선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명이 정당인 혹은 국회의원이고 6명이 전문직, 1명이 인권운동가이다.

<표8> 19대 총선 지역구 여성 당선자

no.	소속정당	지역	성명	직업
1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	김을동	국회의원
2		서울 송파갑	박인숙	서울아산병원 선천성심장병 센터장
3		부산 연제	김희정	정당인
4		대구 북구갑	권은희	㈜헤리트 대표이사
5	민주통합당	서울 은평갑	이미경	국회의원
6		서울 광진을	추미애	국회의원
7		서울 도봉갑	인재근	인권운동가
8		서울 성북갑	유승희	정당인
9		서울 구로을	박영선	국회의원
10		서울 영등포구갑	김영주	정당인
11		서울 중랑갑	서영교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12		광주 서구갑	박혜자	호남대학교 교수
13		경기 광명을	이언주	변호사
14		경기 고양 일산동구	유은혜	정당인
15		경기 고양 일산서구	김현미	정당인
16		경기 부천 소사구	김상희	국회의원
17		전북 익산을	전정희	전북대학교 겸임교수
18		통합진보당	경기 고양 덕양갑	심상정
19	경기 성남 주원구		김미희	정당인

출처: 대한민국 국회(검색일: 2012년 4월 23일)

<표9> 19대 총선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

no.	소속정당	성명	직업
1	새누리당	강은희	㈜위니텍 대표이사
2		김현숙	송실대 경제학과 부교수
3		류지영	㈜유아림 대표이사
4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
5		민현주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조교수
6		박근혜	국회의원
7		손인춘	㈜인성내츄럴 사장
8		신경림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학장
9		신의진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
10		윤명희	㈜농업회사법인 한국라이스텍 대표이사
11		이에리사	용인대학교 교수
12		이자스민	정당인
13		현영희	정당인
14	민주통합당	김현	정당인
15		남인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6		배재정	부산문화재단 기획 홍보팀장
17		은수미	노동정책연구자
18		임수경	사회운동가
19		장하나	정당인
20		전순옥	㈜참신나는옷 대표이사
21		진선미	변호사
22		최민희	혁신과 통합 사무총장
23		한명숙	정당인
24		한정애	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
25	통합진보당	김재연	정당인
26		김제남	녹색연합녹색에너지 디자인 운영위원장
27		윤금순	통합진보당 농민위원장
28	자유선진당	문정림	당 대변인

출처: 대한민국 국회(검색일: 2012년 4월 23일)

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 정당인 혹은 국회의원 10명, 전문직 15명, 시민단체 3명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선거와 비교하여 보면 점차 여성정치인이 정치인으로

서 전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대 총선의 경우 여성위원의 상당 부분은 직업적 전문성과 여성계/시민사회 대표가 다수였다. 그러나 17대에 오면서 비례대표 할당제가 적용되면서 여성위원의 대다수는 정치적 경험 즉 전직 의원 혹은 정당인이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19대 총선에서는 정당인 및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 22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여성당선자는 21명으로 정치적 경험성이 점차 높아져서 가장 많은 여성당선자가 정치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18대 총선에서도 나타났지만 여성위원이 외부에서 충원된 전문직 여성들이 많다보니 당내의 기반이 약하고 이들은 결국 당내 남성 지도부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당내에서 여성 세력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치가 직업인 여성들이 많이 당선됨으로써 이 중에는 다선의 여성위원도 등장하게 되고 이들은 당내에서 여성정치세력화의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대 공천에서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정치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위원이 외부의 직업적 전문성으로 발탁되기 보다는 당내에 정치적 기반을 가진 여성정치인들로 충원되는 것이 여성정치발전에 기여를 하리라고 보여진다.

4. 19대 총선과 여성정치의 과제

19대 총선은 여성정치발전의 관점에서 몇 가지 과제를 남긴다. 첫째 19대 총선은 제도 관철이라는 점에서는 후퇴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에 나타난 지역구 30% 여성공천이라는 과제는 지켜지지 않았고 각 정당에서도 당내에서 여성공천에 관하여 세운 규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여성 지역구 15% 공천을 계획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당내의 반발이 나타났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여성 할당에 대한 당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당 밖에서도 이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 사실상 여성 지역구 30% 공천 권고 조항은 2002년 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삽입된 조항이다. 올해로 10년이 된 해이다. 그렇지만 각 정당 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당내의 합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30%도 아니고 15% 공천을 당규에 삽입하는 데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랐고 15%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역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20대 총선을 위해서 4년 동안 당내에서 이를 위한 합의를 마련하고 당 외부에서도 여성할당에 대한 필요성,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가산점 20%에 대한 많은 논란도 나타났다. 결과적으

로 민주통합당에서는 여성예비후보 2명이 이 가산점에 의해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산점 20%는 사실상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당내 합의 및 정당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경선의 문제점이다. 17대 총선에서도 나타났고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선은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경선이 한국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거슬릴 수 없는 대안이라면 여성과 같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예비후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전략공천에서의 여성의 비율 확정이다. 전략공천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경선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다. 한편 경선 자체가 정당민주화에 긍정적인 대안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도입된 국민경선제도와 모바일 투표 방식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원가능성 및 조직선거의 가능성 때문에 많은 논란을 낳았다. 경선이 대통령 후보 혹은 단체장 후보와 같이 광역 혹은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의 경우에는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만 지역구 단위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나타난다. 국민경선제도가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할 시점이다.

세 번째는 여성정치발전을 위해서 여성들 간의 연대가 절실하다. 사실 17대 총선을 지나면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13%를 넘기 시작하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초당적인 연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성의원들은 여성이기 이전에 이미 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기 때문에 당을 초월한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변수는 정치에서 실종되고 여성들은 남성정치인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정당 내에서 여성을 공천할 때 정당은 여성을 단지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변수가 중요한 변수로 공천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묻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성이라는 변수가 공천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서 성변수가 중요한 공천의 변수가 되도록 판을 짜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나타나게 되면 성 변수는 고려에서 사라진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13%밖에 안 되는 여성의원이지만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성변수를 끊임없이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로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 내에서 성문제에 관한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에 여성의원간의 초당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젠다를 개발하고 그 아젠다를 당내에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여성 의원들 간의 연대를 촉구해야한다. 사실 한국과 같이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비록 비례대표로 당선되지 않은 지역구 여성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당선에 일정부분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17대 이후에 의회에 진입한 여성의원들은 그간의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여성할당

제가 받아들여졌고 그 덕분에 새로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공천을 받고 국회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일정 부분 한국 여성들을 대표하며 여성들의 목소리를 의회에서 내줘야한다. 이것이 결국 초당적 여성의원 연대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대 국회에서는 초당적인 여성의원들의 연대를 통해서 성문제가 끊임 없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당내에서 성변수가 고려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와 연결하여 분명히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들은 자신들이 여성단체 출신이 아니더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은 국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이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대표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정. 1998. "프랑스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문제점" 『한국정치학회보』 32집 1호
- _____. 2001. "2001년 프랑스 지방선거: 부드러운 혁명." 장공자 외. 『분단·평화·여성(V)』. 서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연구소.
- _____. 2002. "후보공천방식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여성연구논총』, 제17집.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 _____. 2004. "2004년 총선과 여성," 『제17대 총선과 여성』.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_____. 2009. "18대 총선에 나타난 여성정치인의 총원" 『사회과학연구』 17집 1호
- 김 우. 2012. "4.11 총선의 결과와 의미" 2012년 한국부패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운태 외 공저. 1999. 『한국정치론』, 제4개정판. 서울:박영사.
- 김원홍, 1996, 『국회의원 여성후보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 _____, 김은경. 1998. 『선거구조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서울:한국여성개발원.
- _____, 김민정·이현출·김혜영. 2003,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국회여성위원회
- _____, 김혜영·김은경. 2001.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과제』. 서울:한국여성개발원.
- 김정숙. 1997. 『여성과 정치 II』. 서울: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김지희. 2000. "16대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 제5회의 여성정치 참여의 이상과 현실; 제16대 총선과 여성 후보의 국회진출: 14, 15, 16대 총선결과의 비교분석," 『16대 총선평가 학술회의』. 서울: 한국정치학회.
- 민준기. 1996. "한국 입법엘리트 총원과 사회적 배경" 민준기 외 『한국의 정치』 서울:나남출판
- 비키 랜달 지음. 2000. 『여성과 정치』. 김민정 외 옮김. 서울:플빛.
- 손봉숙·박의경. 『한국민주주의와 여성정치』. 서울:플빛.
- 신수경. 1997. "한국 주요 정당의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 여성 전국선거구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총원과정 연구," 『의정자료』, 통권 제24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오미연·김기정·김민정, 2005, "한국 정당 여성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 한국의 여성정치"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 전용주. 2005.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 조기숙. 1998. 『세계를 움직인 열두 명의 여성』. 서울:여성신문사.
- 한국정당학회. 2004, 『17대 총선 현장리포트』 서울:푸른길
- 한승조. 1999. "한국정치의 권력엘리트" 김운태 외 공저. 『한국정치론』, 제4개정판. 서울:박영사.
- 홍득표. 2000. "정당의 공직후보 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한국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3호
- 황아란. 2002. "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6집 1호
- Gertzog, Irwin N. 1995. *Congressional Women: Their Recruitment, Integration, and Behavior*. Second Edition. London: Praeger.

- Kim, Minjeoung, 2008, "Theorizing Women's Political leadership" presented at MPSA Conference at Chicago
- Klenke, Karin. 1996. *Women and Leadership: A Contextual Perspective*. NY: Springer.
- Norris, Pippa. 1997. *Passages to Power: Legislative recruitment in advanced democrac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and Joni Lovenduski. 1995. *Political Recruitment: Gender, Race and Class in the British Parlia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hillips, Anne. 1998. *Feminism &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Skjeie, Hege. "Credo on difference-Women in Parliament in Norway" archive.idea.int/women/parl/studies6a.htm (2008년 9월 12일 검색)
- Zetterberg, Par, 2008, "The impact of Candidate Selection on "Quota Women's" Legislative Behavior: Towards a Theoretical Framework" presented at MPSA conference at Chicago

www.nec.go.kr

(색간지)

(색간지)

토론 1.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장)

(색간지)

토 론 문

1. 민주통합당의 여성정치참여 현황 및 활동내용

(1) 당헌과 당규

구분	현 행
경선거산점 (당헌제104조5항)	여성후보자 20% 가산점 부여. 단, 동일지역 선거구 또는 그 선거구가 포함된 지역선거구에서 동급 이상의 공직에 1회 이상 당선된 여성후보자 제외. 전현직 국회의원, 단체장, 위원장은 10% 가산
여성할당 (당규제7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 규정 제8장보칙 제60조)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공천후보자 15% 이상 여성추천

(2)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활동

1) 설치 경과

- 통합수입과정

- 민주당 당개혁특위안과 시민통합당 당헌에 한시적으로 여성의무공천을 일정 비율 해야 한다는 내용 기포함. 따라서 통합수입위에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헌·당규분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이견 발생. 15% 여성의무공천에 대한 반대 또는 소극적 태도로 당헌에 명시하지 못함
- 2011년 12월 15일 민주당 여성위원회, 여성단체 등이 통합수입기구 회의 대응
 - 지역구 여성공천 할당제 관련 당개혁특위안 제출 및 채택 요구
 - 살림정치여성행동, 여성연합, 여세연 등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면담
- 12월 16일(금) 수입기구 합동회의 '여성 경선거산점 조항 당헌 확정'
 - 여성후보자 20% 가산점 부여. 단, 동일지역 선거구 또는 그 선거구가 포함된 지역선거구에서 동급 이상의 공직에 1회 이상 당선된 여성후보자 제외. 전현직 국회의원, 단체장, 위원장은 10% 가산
- 지역구 여성 15% 공천할당 문제는 임시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을 의결

- 임시지도부 과정

- 임시지도부 최고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여성계 원로, 여성단체 등이 면담을 요청하여 임시지도부에서 여성참여 확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통합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보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함
- 2012년 12월 28일 최고위원회에서 끝장토론을 통해 입장 정리함. 당시 최고위에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여성계 원로, 여성의원, 여성단체 회원 등이 최고위원들과 토론을 거쳐 지역구 여성 15% 할당 의무화에 대한 입장이 공유되었음
- 간담회 이후 5차 최고위원회에서 두가지를 결정함. 첫째, 제 19대 국회의원총선거 지역구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둘째, 이를 위하여, 당헌 제 46조(특별위원회)의거, 아래와 같이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2) 주요 활동

- 구성 : 위원장(남윤인순 * 초대위원장 이미경 의원)
간사 : 유승희 의원
위원 : 김민정, 김은희, 나영희, 박옥희, 설인숙, 서혜석, 신명, 이정옥, 이언주, 이재경, 장하진, 최광웅 등

- 주요 활동

- 주 1회 정기적인 회의 및 임시회의
- 지역구 15%할당 실현방안 마련 후 공심위와 최고위에 건의

<<지역구 여성15% 공천 실현방안 제안 내용>>

- 단수후보자 선정함에 여성후보자 지역을 우선 검토하여 단수후보 확정 필요 (여성후보자 중 대역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한 단수후보로 선정 요망, 단수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여성후보자의 경우 그 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
- 여성인재 영입의 경우 전략공천 배려 및 희망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요망
- 여성이 포함된 경선지역에서 여성후보자가 3위일 경우, 경선후보자를 3배수로 선정하여 여성후보에게 경선회기를 부여할 필요
- 공심위 차원에서 공천 불복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천명하고, 이를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 당헌당규에 명시할 필요
- 전략공천의 50% 이상을 여성에게 배정 요망

○ 홍보활동

- 12월 16일(금) 여성정치참여 개혁과제가 빠진 통합은 가짜다(성명)
- 12월 28일(수)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지역구 여성 15% 이상 공천하기로(보도자료)
- 2월 23일(목) 지역구 여성 37명 공천, 25명 당선 목표(기자회견)
- 2월 26일(일) 지역구 여성 15% 의무공천,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기자회견)
- 3월 11일(일) 지역구 여성 15% 의무공천 실현 촉구(기자회견)

○ 여성후보 지원활동

- 공천과정에서의 지원 : 여성예비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경쟁력과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공심위와 최고위에서 지속적으로 피력
- 여성인재 발굴 및 전략공천 : 이언주(광명을), 백혜련(안산단원갑), 임지아(서울서초을), 윤선진(대구서구)
- 재심위 대응 : 여성예비후보자 중 단수공천된 9명에 대해 다른 예비후보들이 불복하여 재심 청구되었음. 이 중 6명은 재심위에서 기각되었고 3명이 인용되어 최고위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기각되었음. 재심위에 참여한 여성위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음.
- 공천 확정된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
 - 여성추천보조금 및 여성정치발전기금 재정 지원
 - 여성본부(구하라본부) 구성 및 여성후보 선거운동 지원
 - 구하라유세 단 유세, 울통, 정책홍보 등 유세 활동
 - 정책홍보단 정책간담회 및 주부층 공략 퍼포먼스 추진
 - SNS소통지원단 트위터, 다음카페 온라인 홍보 활동 및 여성본부 활동상 메일링 발송

2. 민주통합당 여성정치참여 확대 현황 및 평가

(1) 현황

○ 여성당선 현황

(단위 : 명)

정당별	의석수	여성당선(%)	지역구/비례
민주통합당	127	24(19%)	13/11
새누리당	152	17(11%)	4/13

통합진보당	13	5(39%)	2/3
자유선진당	5	1(20%)	0/1
무소속	3	0	0
총 계	300	47(15.7%)	19/28

○ 지역구 여성공천 VS 여성당선 현황

정 당별	전 체	여성공천(%)	여성당선(%)
민주통합당	210곳	21명(10%)	13명(62%)
새누리당	231곳	16명(7%)	4명(25%)
통합진보당	65곳	9명(14%)	2명(22%)

○ 18대·19대 총선 여성공천 비교

18대				19대			
정당	유형	공천	당선	정당	유형	공천	당선
통합 민주당	지역구(전체)	15(205)	4(15)	민주 통합당	지역구(전체)	21(210)	13(106)
	비례(전체)	15(31)	8(15)		비례(전체)	18(38)	11(21)
	합계(전체)	30(236)	12(30)		합계(전체)	39(248)	24(127)
한나라당	지역구(전체)	18(245)	10(18)	새누리당	지역구(전체)	16(231)	4(127)
	비례(전체)	24(49)	11(25)		비례(전체)	21(44)	13(25)
	합계(전체)	42(294)	21(43)		합계(전체)	37(275)	17(152)

○ 지역구 여성후보자 득표 현황

구분	후보명	지역구(선수)	후보득표율	정당득표율	비고
당선자 (13명)	이미경	서울 은평갑(5선)	49.1	37.1	12.0% ↑
	추미애	서울 광진을(4선)	55.2	41.1	14.1% ↑
	박영선	서울 구로을(3선)	61.9	42.4	19.5% ↑
	유승희	서울 성북갑(재선)	51.3	40.6	10.7 ↑
	김영주	서울 영등포갑(재선)	52.9	39.1	13.8 ↑

	인재근	서울 도봉갑(초선)	58.5	40.9	17.6 ↑
	서영교	서울 중랑갑(초선)	40.9	41.1	(-0.2%)
	박혜자	광주 서갑(초선)	42.1	68.5	(-26.4%)
	김상희	경기 부천소사(재선)	51.6	41.8	9.8% ↑
	김현미	경기 고양일산서구(재선)	50.6	37.9	12.7% ↑
	유은혜	경기 고양일산동구(초선)	51.6	36.9	14.7% ↑
	이연주	경기 광명을(초선)	50.1	42.4	7.7% ↑
	전정희	전북 익산을(초선)	39.5	66.5	(-27.0%)
낙선자 (8명)	차영	서울 양천갑(신인)	49.4	39.0	10.4 ↑
	임지아	서울 서초을(신인)	39.0	27.3	11.7 ↑
	장향숙	부산 금정(17대국회의원)	33.7	28.9	4.8 ↑
	윤선진	대구 서구(신인)	10.1	13.4	(-3.3)
	안귀옥	인천 남을(신인)	42.0	33.3	8.7 ↑
	김진희	강원 원주(신인)	43.5	35.6	7.9 ↑
	김선화	충남 아산(신인)	35.1	33.0	2.1 ↑
	배명애	경북 김천(신인)	16.5	12.7	3.8 ↑

(2) 평가

1) 성과

-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공천은 (18대) 15명 ⇨ (19대) 21명으로 6명이 증가하였고, 지역구당선은 4명 ⇨ 13명으로 9명 증가. 전체 여성당선 결과도 12명 ⇨ 24명으로 12명이 증가하여 18대국회 보다 여성의원수가 2배로 늘어남
-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공천은 18명 ⇨ 16명으로 2명이 감소하였고, 지역구당선은 10명 ⇨ 4명으로 6명이 줄어듦
- 당선자의 경우, 13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개인득표율이 정당득표율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득표율이 정당득표율보다 낮은 3개 지역은 공천 결과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낙선자의 경우, 대다수가 정당득표율보다 개인득표율이 높았으며, 특히 정치신인 임지아 후보(서초을)는 민주당의 당세가 매우 취약한 강남지역에서 39%나 득표함으로써 여성정치의 희망을 보여준 사례임

2) 한계 및 과제

- 15% 여성할당 의무화를 지키지 못했음. 15% 여성할당 의무화 약속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이를 실질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지 않았음. 그 이유는 이번 총선은 엠비 심판과 야권연대 구도를 보다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해 후보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되고 야권연대과정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무력화되었음. 민주당은 총 4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된 상황에서 35명-37명의 여성을 공천해야 하는데 경쟁력 평가에서 컷오프된 후보가 22명에 이르렀음. 즉 여성예비후보 발굴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요인임. 또한 여성후보를 전략공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음. 모두 4명을 전략공천했는데 모바일경선제도를 도입하면서 전략공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예비후보들의 저항이 많아 전략공천 자체가 많지 않았고 늦게 이루어졌음.
- 야권연대로 인해 여성공천자 중 전략공천 1명(안산 단원갑), 경선통과한 후보 2인(서울은평을, 경남진주을)이 탈락했음. 여성후보를 발굴해서 어렵게 공천을 한 만큼 야권연대과정에서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여야경합지역에서 여성지역위원장(서울 광진갑, 서울 영등포을)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남성을 전략공천하는 것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 인천남동을의 경우 유력 여성예비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외 요인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지?
- 지역구 여성공천 15% 의무화가 여성의원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젠더관점을 통합시키고 정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부족했음. 이로 인해 여성 15%의무공천에 대한 역풍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음. 향후 여성의원의 역할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
- 민주적 경선제도(예비경선, 본경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성별, 연령, 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민주통합당으로 통합한 후 총선이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여성인재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향후 이에 대한 중단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3) 여성의원의 역할

- 남성독점의 정치구조와 정치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의 인식과 계획을 수립
- 정당 내 여성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
- 여성비례위원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젠더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책무
- 여성을 위한 정당전략 및 젠더입법과제와 정치사회 성폭력문제에 대한 역할 제고
- 여성가산점, 여성추천보조금지원, 여성 의무공천, 여성비례제도 등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여성들은 성평등 국회를 만들 기본적인 책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활동해야 함.

(색간지)

토론 2.

이준한(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색간지)

제19대 총선과 한국여성의 정치세력화 과제

1. 세계의 여성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필리핀 1980년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필리핀 1990년대)
메가와티 대통령(인도네시아 1990년대)
스리랑카의 찬드리카 쿠마라통가 대통령
프라티바하 파틸 대통령(인도 2007~)
미셸린 칼미-레이(스위스, 윤번제 2째 대통령)
메리 로빈슨 대통령(아일랜드 1990~97)
메리 매컬리스 대통령(아일랜드 1997~)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핀란드 2000~)
도리스 로이타르트 대통령(스위스 2010~)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리투아니아 2009~)
로자 오톤바예바 대통령(키르기스스탄 2010~)
미첼레 바첼레트 대통령(칠레)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아르헨 2007~)
라우라 친치야 대통령(코스타리카 2010~)
딜마 호우세페 대통령(브라질 2011~)
앨런 존슨-설리프 대통령(라이베리아 2006~)

2. 세계의 여성 수상(총리)

마가렛 대처(영국)
헬렌 클라크 수상(뉴질랜드)
줄리아 길러드 총리(호주 2010~)
앙겔라 메르켈 수상(독일 2005~)
야드란카 코소르 총리(크로아시아 2009~)
요한나 시귀르다르토티르 총리(아이슬 2009~)
이베타 라디코바 총리(슬로바키아 2010~)
셰이크 하시나 총리(방글라데시 2009~)
캄라 페르사드-베세사르 총리(트리니다드 토바고 2010~)

파키스탄의 부토 전수상
인도의 간디 집안 여자 전수상
중국의 우이 부총리

3. 세계의 여성 의장

의회 의 수장이 여성인 사례: 약 35개 국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미국)
오스트리아, 일본, 영국, 남아공, 콜롬비아, 헝가리, 그리스, 네덜란드, 스위스,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감비아, 스와질랜드, 투르크메니스탄

4. 세계의 여성의원(2011년 3월 여성의 날 발표 기준)

세계 평균치 19.1%
한국 14.5% ≒ 가봉 ≒ 세계 80위/155개국
한국: 13.1%(2000) → 16.3%(2005) → 19.1%(2010)

5. 세계의 여성의원 순위

30% 기준을 넘은 국가 43개 국가
스웨덴(2위) → 아이슬란드(5위) → 네덜란드(6위) → 핀란드(7위) → 노르웨이(8위)
→ 벨기에(9위)
르완다(1위) → 남아프리카공화국(3위) → 모잠비크(10위) → 앙골라(11위)
영국(53위) → 프랑스(63위) → 미국(72위) → 일본(96위)

6. 여성의원 할당제의 효과

2004년 르완다: 여성 쿼터제 도입(24석/80석) 뒤 스웨덴에 앞서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4.3%(1995) → 9.5%(2009) → 11.7%(2010)
바레인: 선출 여성 의원 1명 상원의 22.5%가 여성으로 할당

7. 한국의 여성의원

1-3명(제헌의회~제7대 국회) → 5명(제8대) → 12명(제9대) → 8-9명(제10대~제13대) → 3명(제14대) → 11명(제15대) → 16명(제16대, 5.9%) → 39명(제17대, 13.5%) → 41명(제18대, 13.7%: 지역 14명 vs. 비례 27명) → 47명(제19대, 15.6%: 지역 19명 vs. 비례 28명)

8. 한국 여성의원과 할당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효과

9. 한국 여성의원과 국민참여경선제

개선의 대상

10. 공천약속의 실현

새누리당 30%, 민주통합당 15% 공천 약속

(색간지)

토론 3.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색간지)

토 론 문

4.11 총선에서의 전체적인 여성당선 현황을 보면, 전체 300명의 당선자 중 여성이 47명(15.7%)으로,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24명(18.9%), 새누리당 17명(11.2%), 통합진보당 5명(38.5%), 자유선진당 1명의 여성이 당선되었다. 이 같은 19대총선 여성당선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여성의원 약진’으로 요약된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에서 여성후보자에게 가산점 주기, 지역구 후보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하기 등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 특히 지역구 선거의 경우 역대 최다인 19명이 당선되었으며, 이 가운데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노력이 일정부분 성과를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정진, 2012: 64)는 것이다.

17대총선 이후 2008년, 2012년 총선 결과분석마다 이어지는 여성약진이라는 평가는 과연 적절한 것인가? 여성당선 수치를 바라보는 초점을 ‘여성이 얼마나 늘었나’가 아닌 전체 중 남성에 비해 ‘여성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로 조금만 이동해보면 판이하게 모습이다. 여성참여가 늘어났다지만 전체 지역구 당선자 중 남성비율은 여전히 압도적인 92.3%를 차지하고 있고,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남성 당선자는 300명 중 253명으로 84.3%에 이른다.

국제적인 여성정치참여 현황 기준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은 2011년 12월 말 현재 299명중 여성 국회의원 44명(14.7%)으로 87위 수준이고, 19대국회 여성참여비율 47명(16%) 역시 80위 수준에 불과하다. 전반적인 세계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비교해도 한국은 여전히 평균에 미달한 수준이며, 아시아지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수치이다. 오히려 이제 정말 여풍이 불어야 할 시절이 되었다고 해야 옳은 것이 아닐까 싶다.

세계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구 분	단원제 또는 하원	상원	양원제
세계 (World)	19.7%	18.7%	19.5%
북구 (Nordic countries)	42.0%	-	-
유럽 (Europe_OSCE member countries)	22.6%	21.1%	22.3%
아메리카 (Americas)	22.6%	23.4%	22.7%
아프리카 (Sub-Saharan Africa)	20.4%	19.4%	20.2%
아시아 (Asia)	18.3%	14.3%	17.9%
태평양 (Pacific)	12.4%	34.8%	14.9%
아랍 (Arab States)	11.3%	7.3%	10.7%

* <http://www.ipu.org/wmn-e/world.htm> 2011년 12월 31일 현재

■ 제도의 측면 : 19대 총선 여성할당 얼마나 진전되었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크게 쟁점화 된 부분 역시 지역구 여성 의무공천제였다. 다만,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아닌 각 당 당헌당규를 통한 지역구 여성공천 확대가 논의되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여성 15% 의무공천을 당규로 정했고, 새누리당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역구 여성공천 30% 노력 및 경선 시 여성후보자 가산점 부여를 결정(2012.1.16)해서 공천개혁의 바로미터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결정은 이미 공직선거법과 당헌에 규정된 원론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오히려 혁신으로 포장된 정당 통합 과정에서 여성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할당조항이 일부 후퇴하였다.

말잔치는 풍성했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이전의 선거에 비해 공천과 당선이 현저히 낮아졌고, (구)민주당 당개혁(안)부터 따지자면 민주통합당 역시 여성가산점 조항이 당헌에서 당규로 밀려났다. 그나마 지역구 15% 여성 의무공천 당규제정에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당 지도부에 당규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의무조항이지만 위반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비어있어 사실상 반쪽짜리 제도였고, 결국 이후에 당규개정을 통해 15% 의무공천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다.

물론 제도개선과 여성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진보/보수를 넘어 여성들이 공조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야권단일화 과정 등과 맞물리면서 진보여성운동이 새누리당에 여성공천확대에 관해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선거결과 이전에 비해 저조한 여성참여를 보여준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도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통합진보당 역시 3자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민주노동당 당시의 여성할당 30%가 20%로 후퇴되었고, 야권연대 와중에 이마저도 준수되지 못했다. 광역별로 여성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앙당이 명부를 거부하는 패널티도 이행되지 못했다. 여성할당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북유럽의 경우 진보정당의 여성할당 실천이 여타 주요정당에까지 확산되는 할당제 '전이현상(contagion theory)'을 보여주고 있는데 (Matland and Studlar, 1996) 비해, 한국의 경우 할당제 전이현상은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6) 민주통합당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_지역구 여성 15% 의무공천'
제8장 보칙 제60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공천후보자 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오히려 19대 총선에서는 ‘더 중요한’ 당 통합과 야권연대를 위해 ‘부차적인’ 여성 할당이 희생되는 양상이 드러난 것이다. 개별적인 후보간 합의를 통해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여성가산점이 적용된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각 당의 대표가 여성이고, 협상대표도 여성이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는 거의 관철되지 못했다.

■ 정당 내 여성운동이 중요하다.

지난 18대 총선 결과를 정리한 발제의 마무리에서도 앞으로는 “정당 내 여성운동이 중요하다(오유석·김은희, 2008b)”로 마무리 했었는데, 이 문제는 여전히 반복적인 강조가 필요하다.

이번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여성당선자 확대는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러한 여성정치할당제를 정당 내에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국회의원과 정당 내 여성조직의 강력한 연대, 여성당원들의 지지·지원이 하나가 되어야만 관철이 가능하다. 물론 외부위원까지 참여해 구성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가 역할을 했지만, 실제 이번 총선과정에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활동 외에는 여성당원들이 여성공천확대를 위해 그리고 당내의 일부 반여성적 문화나 후보 공천에 대해 합의된 목소리로 대응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15% 여성할당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반발에 대해 당내 여성 전체 차원에서 대응하지 못했고, 선거 후 일부에서 선거결과 평가에 대해 여성들에게 적절치 못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그 외에 지역별로는 여성 지역구 당선자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9명과 6명의 여성 후보자가 당선되어 전체 지역구 여성 당선인의 78.9%가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8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악되었는데(여성 지역구 당선자 14명 중 서울경기지역 당선자가 12명), 이는 아직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여성후보가 공천되거나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유능하고 참신한 여성인사에 대한 외부영입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는 지금 시점에 여전히 ‘후보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정당의 직무유기이며, 당내 여성정치인 육성에 무관심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정

7) <민주진보진영후보 단일화와 인천시민승리를 위한 2012인천시민정치행동>이 지역차원의 공식제안으로 중앙 경선관리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내용으로, 후보단일화 경선률에 있어서 여성후보에 대한 15% 가산점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 경선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이 경선관리위원회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수용이 불가하고 다만 향후 각 당 지도부에 단일화 경선시의 여성가산점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당은 선거 때나 되어서야 부랴부랴 여성후보를 찾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터 잡고 활동하는 여성후보를 발굴·육성하는데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정당 내 여성리더들도 이를 위한 관심이 요구된다.

■ 공정한 공천원칙의 제시 :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국민경선이 과연 바람직한가?

본선에 뽑힌 여성후보의 경우 대부분 선전해서 민주통합당의 경우 21명을 공천해 13명이 당선되었고, 여성의 지역구 공천 대비 당선비율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입증됐다. 특히 예외적인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여성후보들이 얻어낸 득표율은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율보다 높았다. 실상 여성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통념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에도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었지만 반복되어 온 주장이다. 18대 총선에 지역구에서 낙선한 여성후보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모두 해당 지역의 정당득표율에 비해 후보의 개인득표율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 여성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바로 '후보가 될 권리'이다. 여성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당내 경선과 공천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본선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다. 정당들은 후보 공천의 중요한 기준으로 '경쟁력'을 꼽으면서도 여성들은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폄하하면서 공천에 인색했지만, 19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다.

결국 선거 시기 공천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정당에 있고, 정당 내에서 후보를 어떻게 공천하느냐 하는 방법은 여성후보의 기회 확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직후보의 선정기준 역시 정당 민주화라는 큰 방향과 맞물려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별도로 여성할당 규정을 정해놓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도 투명한 관료제적 후보선정과정의 확보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Matland, 2005: 96). 공천에 관한 규칙이 공개적이고 분명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기득권이 없는 여성후보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권력의 내부로 다가가기 위한 전략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후보는 적극적으로 지역구에 도전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당내공천시스템 형성에도 기여함으로써 여성후보들에게 보다 많은 공천 기회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번 총선의 경우 특히 공천과정에 국민경선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대선후보나 당 지도부 선출 등 전국단위가 아닌 개별 지역구에 국민경선을 도입할 경우 선거인단 규모 등 여러 면에서 부정적인 우려가 제기되었고, 특히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 구체적인 지역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여성 지역구 공천 확

대를 위해서는 전략공천이 가장 효과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 앞으로의 숙제들

이번 4.11 총선은 여성들의 지역구 진출 확대라는 성과와 함께 여전한 보수적 남성중심 정치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선거였다. 여성의무공천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 외에도 여성비하 막말발언과 성추행 당사자가 공천되고 당선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기대보다 낮은 투표율로 인한 야권연대 다수의석 확보 실패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떠넘겨 온라인 SNS 상에서 ‘20대여성 투표율이 8%에 불과하다’는 근거없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군소정당의 보수성이 그대로 드러나 비례대표 후보 명부 전원을 남성으로 배치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정치권 저변의 보수담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도 여성운동과 여성정치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여성이 여성을 대표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각자의 젠더정체성을 확인하고, 여성친화적인 의정활동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이미 17대 국회 여성의원 확대가 여성관련 의제 및 여성관련 법 제·개정 증가, 각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여성 의원 수 증가, 남성의원들의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김현희·오유석, 2010), 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가치가 존중되는 성평등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성평등정책은 단지 여성만을 위한 정책도 또 여성의 원만이 부담해야 하는 역할도 아닌 사회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모색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이전에 비해 늘어난 이후 국회 내의 여성연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소속 정당 차원에서 또 정당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여성들 간의 연대는 적극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오유석·김은희, 2008a). 스웨덴 등 여성정치선진국의 경우 의회 및 정당 내 여성들이 서로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젠더이슈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 점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도 고민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20개 젠더정책요구안을 마련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는데, 새누리당 여성 비례대표들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어느 정당에 속해 있던 50% 할당을 통해 비례대표명부에 이름을 올린 여성들이 젠더정책에 대해 방기하는 태도를 어떻게 극복하고 묶어낼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 지역구의무공천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 외에도 여성참여확대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제도 전반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여성 의원들의 기여

가 필요한데, 바로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가 그것이다. 금번 19대 총선 당시 총선 유권자네트워크, 경실련,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 등 시민단체들의 정책요구에 공히 포함된 비례대표를 확대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직능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에 비해 소수의 이해가 반영되기 쉬운 비례대표제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율도 일반적으로 높아진다(Lijphart, 1994: 1-14). 물론 지역구 기득권과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부담이 없지 않지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의석수 확대를 공론화 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현출, 2011: 22)이 정치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의원정수만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으면서 선거구조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를 시도한다면 새로운 정치혁신의 시도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은희(2011), "여성정치활동당제를 넘어서_실질적 여성정치세력화를 향한 전망", 「여성정치활동당제_보이지 않는 벽에 문을 내다」, 인간사랑, 2011
- 김현희·오유석(2010), "여성정치활동 10년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동향과 전망』, 2010년 여름호
- 오유석·김은희(2008a), "17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와 과제", 17대 여성의원,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나 토론회, 21세기여성포럼/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2008.2) 참조.
- 오유석·김은희(2008b), "18대 총선 결과와 향후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방향 모색", 통합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주최 18대총선 평가간담회(2008.5.14) 발제문
- 이정진, "제19대 총선 결과 분석 및 공천 쟁점", 제19대 총선과 정당정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19대 총선 평가와 분석 공동학술토론회 (2012.4.19)
- 이현출(2011), "중복입후보제와 여성대표성", 19대 총선을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방안 모색, 201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기획패널
- 조현옥·김은희(2010), "한국여성정치활동당제 제도화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동향과 전망』, 2010년 여름호
- Lijphart, Arend. "Unequal Participation: Democracy's Unresolved Dilemm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 1994
- Matland, Richard E., 2005, "Enhanc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Legislative Recruitment and Electoral Systems" *Women in Parliament beyond numbers*, IDEA
- Richard E. Matland and donley t. Studlar, 1996. 'The Contagion of Women Candidates in-Member District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s: Danada and Morway', *The journal of Politics*

